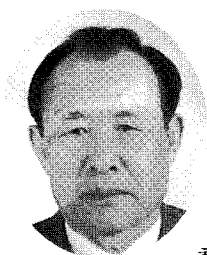




# ‘식량의 안정적 생산 공급’ 보다 앞서가는 개발만능주의

변화무쌍 첨단시대도 ‘먹거리의 중요성’ 만고불변의 진리  
농사, 건강 행복 창출해 ‘예술의 경지’ 이르게 하는 正道

■ 박정식 근대농업협동조합장



60~70년대 개발도상국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오직 경제개발만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지상명제에 가리어 환경이나 자연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한 상태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워낙 배고프고 빈한 하여 우선 기아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시급했다. 중농정책으로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는 것 또한 당시 정부의 지상과제였다. 그러나 중농정책만으로는 응

급처방은 될지언정 경제성장을 근본적으로 달성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었다. 농공병진 정책을 거쳐 중화학공업 정책으로 선회할 수 밖에 없었던데는 농업을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경제성장을 가속화 하는데는 중화학공업의 선택 외는 대안이 없었던 당시 최고 정책입안자들의 고뇌가 있었을 것이다.

새마을 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초가집을 없애고 마을길을 넓히고 경부고속도로가 열리면서 역사는 바뀌기 시작했다. 하던된다는 자신감과 신념으로 근면, 자조, 협동이 일대 국민운동으로 승화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개발만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시대가 있었기에, 우리 국민 모두가 땀흘려 열심히 일했기에 오늘의 역사와 우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역사의 과정이 어떠했던 우리 앞에 펼쳐진 21세기는 분명 어제와 세기가 아니다. 정보와 신지식이 지배하는 참으로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분명 있다. 만고불변의 진리 같은 것도 있을지 모른다.

### **무분별한 개발, 식량자급에 영향 주지 말아야**

모든 동물은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만약에 인간의 식량을 땅에서 생산하지 않아도 될 시대가 온다면 모르긴해도 그때는 사람사는 보람도 잃어버리고 인류가 어찌면 지금보다 더 불행하게 되는 무의미한 시대가 될지 모른다. 인간은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그것은 인간의 의식주는 오직 흙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소박한 진리에서 나온 말이다. 이제 우리는 흙을 사랑하고 흙을

살려야 한다. 식량의 안정된 생산공급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농지는 보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식량자급율은 30%이내지만 다해도 평년작의 경우 주곡자급율은 90% 내외이다. 게다가 벼농사의 10년연속 풍년으로 주식의 절박함을 실감하지 못해서인지 오늘날 농지의 무분별한 잠식은 우려할 수준을 넘어섰다. IMF위기를 넘기는데 절대적 역할을 한 주곡의 자급을 평가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 이제 마냥 10년연속 풍년의 신화만을 구가할 수는 없다.

세계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변이 언제나 남의 일일 수 만은 없다. 일부 식지층에서까지 자유무역체제하에서 수입운운 하지만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생명창고의 열쇠를 내어주는 것과 다를바 없다. 식량위기는 분명히 오고 있는데 설마하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8억의 인구가 기아선상에서 고통받고 있단다. 믿어지지 않는다. 빈사상태에서 헤매는 인류를 우리는 외면할 수 없다. 이제 우리의 식량정책은 자급수준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빈민국을 도울수 있는 수준까지를 생각하면서 멀리 앞을 내다봐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식량자급만 중요하고 개발은 덜 중요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식량자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개발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다.

### **이농과 인구의 대도시 집중, 이대로 좋은가?**

농업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에 따라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농업인구의 감소를 바로 경제성장 그 자체로 인정하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물론 공업의 발달은 많은 근로자를 공장으로 불러 들이게 마련이

다. 공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된다는 경제학설에 따르지 않더라도 소득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다. 경제발전의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이농에 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농촌의 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언제나 농촌을 떠나더라도 충분히 대비할



### 밀레니엄論壇



수 있는 기반구축이 선행되었다면 오늘의 농촌이 이렇게 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드리고 있다. 경제발전의 부산물인 것 처럼 넘겨버린다. 규모의 경제를 내세워 농촌인구 감소만이 평균 경지면적을 늘려 결국 농업인도 경쟁의 대열에 참가할 수 있다는 발상은 어찌하면 올바른 방향 설정인지 모른다. 그러나 농업인구가 전체인구의 10%미만으로 떨어졌는데도 호당 경지면적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면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다.

이농은 그 자체만의 문제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바로 인구의 대도시 집중이라는 어찌하면 이농보다 몇배나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오늘날 인구의 대도시 집중은 이제 포화상태를 넘어섰다.

매년 60만명(약 15만호)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농촌은 줄고 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매년 15만호의 집을 대도시에서 새로 지어야 하고 15만대의 자동차를 대도시에서 새로 늘려

야 하니 생각만해도 아찔하다.

집을 지어야 하고 도로를 넓혀야 하고 지하철을 뚫어야 하고 상하수도 쓰레기, 매연 등 대도시 인구 1인의 부담비용이 무려 농촌인구 5인의 부담비용과 맞먹는다고 하니 낭비치고는 너무나 지나친 낭비다. 농촌에는 학교가 남아 폐교가 되어가고 있는데 대도시에는 새로 지어야 하니 그것도

낭비라면 낭비가 아닌가?

물론 인구의 대도시 집중을 막는 길은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 물리적으로 막는다고 될 수도 없거니와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될 수도 없다. 문제는 농어촌에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낮고 자연과 가까이 함으로써 훨씬 인간생활에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크게 뒤지지 않는 생활과 문화가 제도적으로 보장만 된다면 굳이 대도시로 대도시로 밀려들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늘날 지방 정부마다 인구 유인책을 쓰고 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인구가 대도시로 집중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류만을 지향하는 것은 타할 바 아니지만 일류 대학, 일류 병원, 일류 문화예술 등 온갖 일류시설이 몇몇 대도시에서 집중되어 있는데 지방을 떠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 지방에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

## 직접지불제의 도입을 촉구하는 이유

이농과 인구의 도시집중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묘안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이농과 인구의 도시집중을 상당히 완화할 방안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농촌에 직접지불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더욱이 조건 불리지역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가령 상수원 보호지역이라든지 면단위 이하 지역 또는 경지정리가 안된 농경지 등 조건불리지역의 직접지불제부터 도입하면서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 예산당국은 당장에 효력이 없는 불필요한 비용이라 일축 할지도 모르겠으나 따지고 보면 이만큼 효과 있는 처방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구가 대도시에 집중함으로써 부담하는 비용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WTO에서도 허용되고 있고 선진 각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하여 인구의 도시집중을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례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의 원리가 어찌면 오늘의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데 더없는 촉진작용을 했다는데는 부인하고 싶지 않다. 다만 상당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까지 일방적으로 경쟁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정부의 농촌지원책이 상당부분 보조에서 용자로 전환되고 있지만 조건불리지역의 지원이 선행되어 거의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준 다음에 경쟁을 통하여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직접지불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룰 아무런 이유가 없다.

##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 중시

흔히 농업을 쇠퇴산업이다 사양산업이다 하여 마치 별볼일 없는 분야처럼 치부하는 예를 보면서 참으로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이 산업으로서의 점차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농업의 기능마저 낮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가령 우리나라 논 전체의 저수능력은 소양댐의 6~7배에 이른다. 작물의 동화작용으로 인한 대기정화 능력은 가히 천문학적 가치이며 자연보호, 국토보존, 민족문화 계승, 국민정서 함양 등 그 공익적 다원적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 농업도 새로운 방향설정을 요구 받고 있으며 신토불이가 온 국민의 공감대로 정착되고 있다. 국민의 식량과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숭고한 사명을 저버릴 수 없다. 오직 안정된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온갖 지혜를 모아야 한다.

비료 농약의 적정 사용으로 공해 없고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오직 농심으로 돌아가 농사가 단지 상업적 차원을 넘어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창출해 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예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한다. 농촌에 사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고향에서 씨뿌리고 가꾸고 거두어 들이는 농업을 천직으로 삼고 농촌을 축복받은 낙원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은 이제 우리 농업인들의 몫이다. 더욱 노력하여 우리 모두의 소망인 복지 농촌 건설이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해야겠다. **농약정보**